
「2022-제4호(Vol. 22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2. 5. 27.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경제동향 5월 • 2022년 5월 최근 경제동향 • 팬데믹 후 글로벌 공급망 축소의 경제적 영향 • 러시아發 천연가스 공급 차질에 따른 주요국의 대책과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
2. 재정 (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1명당 1천 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 2022년 5월 재정동향 및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3. 예산·재정 관련법령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대학-지역기업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하자 •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에너지원별 현안과 과제 •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 지출구조조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통보 • 올해 청년마을 12곳 선정, 청년과 지역 상생 모델 만든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1. 경제

출처

■ KDI 경제동향 5월

한국개발연구원

최근의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3월 중 극심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감염병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고용여건이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4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향후 서비스업의 회복세 강화가 예측됨.
-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양상임.
 - ◆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제약받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극단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며 대외여건이 악화됨.
 - ◆ 이에 따라 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가 전월에 이어 낮은 수준에 머무름.
 - ◆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됨.

[바로가기](#)

■ 2022년 5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 (최근 국내경제)

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고용회복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제약요인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상승세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확산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금리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등 통화긴축) 가속화,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물가상승 부담 완화, 소상공인 피해회복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신속 지원 등 민생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는 상황임.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감소함.

(고용부분)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5만명 증가,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대비 1.0% 하락함.

(금융시장 부분) 미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 및 국고채 금리는 상승함.

(물가)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함. 특히 석유류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및 농·축·수산물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코로나 확산 관련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수입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바로가기](#)

1. 경제

출처

■ 팬데믹 후 글로벌 공급망 축소의 경제적 영향

국제금융센터

- (배경)

글로벌 공급망은 특히 팬데믹 이후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생산체계 전환 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해 향후 글로벌 공급망 축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영향)

■ 경제성장률 영향 : 글로벌 공급망 축소시 주요국 실질 GDP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공급망 확산기(2000년대~2010년대)와 확산기 이전(1990년대)으로 비교해 보면 확산기에는 신흥국 경제성장률이 노동생산성 증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될 경우 노동생산성 개선 부진 등으로 실질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이션 영향 : 글로벌 공급망 축소로 인해 인플레이션 글로벌 동조화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가중될 전망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기에는 중간재 생산국가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동조성이 높아졌으며 향후에 공급망이 축소된다면 인플레이션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악화되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이 전세계적으로 축소될 경우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가중 압력 등 성장·물가 경로의 충격이 발생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바로가기](#)

■ 러시아발 천연가스 공급 차질에 따른 주요국의 대책과 평가

국제금융센터

- (이슈)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급 불안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요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임. 작년말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최근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의 갈등이 악화되어 유럽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급 차질 우려가 점증되고 있음.

- (주요국 대책) 유럽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자립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스 수급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유럽 지원에 중점을 둠.

■ 유럽 : 영국은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반면,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독일, 이탈리아 등은 대체공급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의 안정적 수급에 최우선을 둠.

■ 미국 :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대체수요 급증에 대응한 가스 생산과 對유럽 수출을 확대함.

- (평가) 유럽은 대체공급원 확보와 에너지믹스의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제약요인도 상존함. 한편 미국은 유럽의 이태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면서 에너지시장에서의 미국 패권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가 5월 13일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상승,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하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물가의 안정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임. 추경예산의 세출 증액은 총 5개 분야로 59.4조원 규모이며, 각 분야는 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1조원, ④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지방이전 지출 23.0조원 임. 재원은 초과세수 53.3조원,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원, 지출구조조정 7.0조원으로, 이 중 9.0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국가채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조원이 감소한 1,067.3조원으로 GDP대비 49.6%에 이를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재정건전성·국세수입 경정 등의 재정총량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지원, 방역 보강, 물가안정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과,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한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및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음.

[바로가기](#)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1명당 1천 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한국경제연구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하며 미래 사회 변화에 맞는 교육개혁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한 현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으로,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50년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목적 및 기본원칙을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육적 논리로 교육정책에만 제한하지 말고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보육-교육-고용-복지 사회정책 전반의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고려해야 함. 셋째, 유·초·중·고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교육의 재정투자 비중을 높이는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넷째, 고령사회 진입과 관련 은퇴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요구가 늘어나기에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적 지원 확대도 필요함. 다섯째, 교육평등 실현이라는 교육격차 해소의 의무교육 차원을 넘는 시민기본권과 평생교육 차원으로 죽을 때까지 배우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 시각으로서, 교육재정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함.

[바로가기](#)

■ 2022년 5월 재정동향 및 이슈

기획재정부

- (재정 운용 동향)

- ①총수입: 고용·수출 증가세 등으로 국세·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1%p 증가한 30.8%
- ②총지출: 감염병 위기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한 32.6%
- ③재정수지: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5.5조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원 개선
- ④국가채무: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9조원으로 '21년 결산 대비 42.8조원 증가
※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지방정부 채무는 연1회 산출)

- (주요 재정 이슈)

[그간의 국유재산 개발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보존·유지 중심에서 2000년대 이후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로 전환되었음. 노후 청·관사를 단순 재건축하던 것에서 벗어나 청사와 주택, 창업 공간, 생활SOC 등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 대규모 토지개발을 추진 중임. 금년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적극적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 중으로, 민간참여개발제도 활성화,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총괄청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증가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나갈 것임.

[주요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용현황]

주요국(영국·프랑스·독일·미국·일본)은 재정계획의 형식과 대상기간은 다르나 재정수지, 채무에 관한 중기 재정전망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국가별로 설정기간, 법적구속력, 목표 등에 있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별 주요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정책과 시사점]

미-중 패권다툼으로 경제 안보가 부상되면서,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러-우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국 역시 '19년 일본 수출규제와 '21년 하반기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역내 공급망을 강화중임. 세계 각국의 분업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 국가나 기업이 공급망 전체를 구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동맹국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임.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2.4.20. 시행 '22.4.21.)

법제처

- 공유재산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조성 기준, 공유재산정책협회의 구성·운영, 제한경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는 사유,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사용료·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2.4.27. 시행 '22.5.1.)

법제처

-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2.4.27. 시행 '22.5.1.)

법제처

-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자체-대학-지역기업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하자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논의 배경) 2021년 학령인구 감소로 비롯된 전국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지방대학의 감소율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현상 중 심각한 측면은 지방 청년인구 감소로써, 학업과 직업 등의 이유로 지방을 떠난 청년들의 귀환율이 낮아 지방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됨.
-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 ① 지방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 지방대학 육성 필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교육부,20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구축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②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의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지역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은 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주요기능으로, 이는 지역기업 발전을 유도하므로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기업과 연계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지자체의 지역기업 육성정책은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역기업 성장에 기여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기술혁신 지원 등에 집중되기에,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의 3주체는 상생 구조임.

- ③ 지자체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의 관점으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은 고등교육 지원정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여야 함.

[바로가기](#)

■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배경)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함. 또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해양유입 폐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등은 심각한 환경 및 경제적 문제를 초래함. 이에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현황) G7,G20,WTO 등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평가 및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에 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소비·처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도 협약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내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폐기물 불법 수출입 금지, 개도국의 재활용 역량 개선, 해양폐기물 대응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함.

[바로가기](#)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 (서론)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현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정규직 위주로 설계된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은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보호 제도의 한계로 인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수적이면서도 취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지속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함.

(현황과 과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 2가지 중 제도적 사각지대에는 자영업자를, 실질적 사각지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들 수 있음.

①제도적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는 과거보다 감소하였는데 특히, 비자발적 유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영업의 자발적 선택 이유로 독립 사업체경영, 근무시간 재량성, 독립적 업무처리 등을 들 수 있고,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과밀화는 특히 50대 이후 임금근로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실제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임. 이는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영업자가 다수로,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별로 상이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게다가, 직업과 자산요인이 포함된 모형분석 결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에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음.

②기존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유는 사업장 규모와 임금수준보다도 인사노무관리의 비공식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통계상 오분류된 사실상의 자영업자들과 실제 선택에서 자발적으로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자발적 비공식 일자리 취업자를 살펴보면, 20대 초반 이하 청년층에서는 주로 재학생의 단기간 근로이고,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가구내 부가적 소득자 또는 빈곤층 복지수급가구원이거나, 특고, 프리랜서, 비공식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파악됨.

(결론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안전망의 가장 큰 변화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로서 해당 취업지원 서비스를 먼저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실업부조는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며, 실업부조 수급액의 인상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에는 한계가 있어 대폭 개편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실업부조를 내실화하고 강화하여 비공식부문의 참여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서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에너지원별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개요) 최근 제20대 대통령인수위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생활과 산업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최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에너지원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에너지원별 현황 및 문제점) 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탄소중립정책 방향이 유지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소재 및 부품 국산화율이 낮아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②천연가스 발전량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공급망 차질로 수급 불안정과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문제에 직면해있음. ③석탄 발전량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며 전체 발전량의 비중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로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속적으로 폐지하거나 연료전환으로 시행될 예정임. ④원자력 발전량은 10년 이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EU기준의 실질적인 규제요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사고저항성 핵연료)이 적용될 전망이다.
- (시사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에너지원별 당면 과제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①재생에너지 확대경로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망의 혁신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가치사슬 강화 투자 확대 ②천연가스 수급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민간 역할을 확대하며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의 상용화에 힘씀 ③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감축 전략과 지원방안 마련 ④원전활용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사고저항성 핵연료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

[바로가기](#)

■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전 세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기부양 및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재정준칙 시행국들(현재 106개국)은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재정준칙의 예외 및 일시적 중단을 허용하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법적 강제성과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음.
- (주요국과 비교)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GDP 대비 일반정부의 채무 비율이 47.9%(2020년 IMF기준)에 도달하였음. 그러나 현재 EU 등 주요국들이 채무 비율 상한선을 60%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지출 및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시사점 및 제언) 향후 재정준칙 도입 논의 시에는 정부가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시에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지출구조조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 (들어가며) 최근 정부는 68.4조원 규모의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출구조조정’ (7.0조원, 총 재원은 10.2%)을 통해 마련하였음. 이는 국채발행이라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존 예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존 사업비 감액으로 임의적 사업 축소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는 바, 그간 지출구조조정의 활용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현황)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사례는 2000년 이후 총 4회로 2020년 이후에 집중되고 있고 금년도를 포함하여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졌던 2020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상에서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 재량지출에 대한 의무 삭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연례적으로 주문한 바 있음.

[표 1] 추경 재원마련 방안 중 지출구조조정 현황('01~'22)

(단위: 조원)

구분	'13년 2회	'20년 2회	'20년 3회	'22년 2회
국채 발행	15.8	3.4	22.9	-
세계잉여금	0.3	-	-	4.6
한은잉여금	0.2	-	-	1.4
기금 재원	0.7	1.7	1.1	2.1
세입 경정	-	-	-	53.3
지출구조조정 (세출감액)	0.3	7.1	11.1	7.0
계	17.3	12.2	35.1	68.4

※ 주: 22년 제2회 자료는 예산안 기준, 그 외는 확정예산 기준
 ※ 자료: 각 연도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주요쟁점)

새정부 출범 이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첫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사업 선정 및 규모의 적성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 제도운영상 한계

① 단기적 감축에 따른 비효율 - 구조조정이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재원마련을 위해 계속 사업의 지출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② 일률적 삭감에 치중 - 단기간 추진이 용이한 단순방식의 운영경비 등을 일괄 삭감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나 일괄 삭감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절감했기에 삭감 여력이 축소된 상황임.

- (개선방안) ①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선 사업계획 미비, 사업추진 지연 및 대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 본예산으로 반영토록 시정 ② 매년 실시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 평과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관리 예산제도 활용 ③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각 정부 부처간 대립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 구축

- (나가며) 추경 편성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 신규 사업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써 기존 세출감액을 바탕으로 한 ‘지출구조조정’ 이 최근 적극 활용되고 있음. 국채발행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임의적인 사업 축소 우려 및 단기적인 사업비 감축 시도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예산 반영, 성과 관리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능별 배분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출구조조정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그 지역 주민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3.1.1. 시행)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법률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모금 강요 등의 법령 위반시 모금 제한) ▲답례품 선정·제공(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하며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등 임.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로써 행정안전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바로가기](#)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5월13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3월 31일 기 배포
각 부처는 금번 추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요구할 예정이고,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토록 하였음.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바로가기](#)

■ 올해 청년마을 12곳 선정, 청년과 지역 상생 모델 만든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청년들과 지역이 상생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는 청년마을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힘.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2억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 평가로 최대 2년, 연 2억원씩 추가 지원함.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조성된 전국 15개 청년마을과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발대식을 7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청년마을 조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기재부·국세청에 제기된 가장 비중이 큰 양도세 민원)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를 1년간 한시 배제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③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임. (개정일 이전 '22.5.10부터 소급하여 적용)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바로가기](#)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상품권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이익을 취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10월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였음.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336건의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발견하였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조사와 청문을 실시한 결과로 109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 환전대행관리시스템 등 구축 인프라를 보급·확산하고,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며, 향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운동(캠페인) 등 자정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힘.

[바로가기](#)